

### 검찰,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조만간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검찰이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만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 내부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조차 이 대표가 세 차례나 검찰 조사에 응한 데다 영장 청구 사유가 비합리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부결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그간 민주당에 불거져왔던 이재명 방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반대로 가결될 경우에는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위기를 맞는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여론 항변에 촉각을 서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오는 24일 첫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의 요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송부한다. 국회는 이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된다.

당내에서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맞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이 당의 총의라는 생각"이라며 "의원들 총의가 그

친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재적 의원 289명 중 국민의힘 115명과 정의당 6명·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1명까지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한 때, 민주당·무소속 의원 쪽에서 28명의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최근 혼자서 비명계 의원들을 두루 만나고 있는 이 대표가 이러한 당내 이탈표를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본인의 공약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구속영장 신청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영장신청서를 받으려면 갈끔하다"며 "본인의 결단 사항이고 강제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가 실질심사에 정당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과 이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서 증

거를 조작하는 지났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그간 민주당에 불거져왔던 '이재명 방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비명계뿐 아니라 친명계 사이에서도 이러한 부담에 체포동의안 부결의 당론 채택보다 자유투표로 무게를 싣고 있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이 대표가 사상 초유로 구속되면서 이재명 체제가 위기를 맞게 된다. 구속된 이 대표의 대표 직무가 사실상 정지되면서 당 전체가 심판론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에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당내 이탈표 방지 등 결속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11시30분경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당 차원의 대대적인 대응에 나선다. /뉴시스

### 24일 본회의 보고 이후 28일 표결 가능성

#### 부결시 '방탄' 논란 불가피... 가결시 민주당 위기

접수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치게 된다. 2월 임시회 회기가 오는 28일 끝나는 만큼 국회는 27일이나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169석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작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러 것이라고 하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받아보고 상식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을 보고 부결 여부를 정하겠다는 이들이" 율

### 김종인 "적극 투쟁해 표 얻는 시대 지났다"

#### 친이낙연계 싱크탱크

#### '연대와공생' 포럼 강연서

#### "민주당 내 사법 리스크

#### 이재명 개인 사안"



김종인 전 국민 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친이낙연계 인사 상대 강연회에서 "야당은 백날 극한 투쟁하는 게 최대 목표라 생각하는데, 그게 해 곤 표

가 안 나온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친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공생' 포럼 강연에서 "적극 투쟁해 표 얻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 정보가 모자라요 일반 국민이 뭘 잘못하는지 인식하기 어려울 땐 야당의 극한투쟁이 열리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정보를 접하는 능력이 높아져 야당이 소리 안 쳐도 국민이다 안다"고 했다.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 투쟁하면 국민이 짜증내는 게 오늘날 현실", "지구 장의 투쟁한다, 대입한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다 가봤는데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며 "서로 타협할 줄 모르고서 계속해서 서로 시비나 걸고 지내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율러 "시대는 발전하고 경제 발전하고 사회구조 변화되고 사회구조 변화되니까 국민 의식과 행태 다 바뀌었는데 정치만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민주당에서 역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당을 경험해 봤는데, 두 당에 실망했다"며 "당신 정당에 가서 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이미 지버렸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민주당 내 '사법 리스크' 우려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방향의 언급도 했다.

이와 함께 "지금 나쁘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그걸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대와공생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확대 해석을 우려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이날 행사엔 초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뉴시스

## 전북 신보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 도의회 인사청문위... 도의회 의장 보고 거쳐 도지사에 승부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6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 신보보증재단 후종관 이사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국가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및 서울신보 이사장 재직 중 큰 과오가 없었고 성실히 근무한 점, 전문성을 살린 실무경험과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 반면, 사전 내정설이 불거져 공모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으며, 정치기부금 외에 사회 기부활동 내역이 미비한 점, 34년 공직생활 동안 전북을 위한 활동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한종관 이사장 후보자는 최종발원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받은 질책과 충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하나씩 채워

나가고 재 고향 전북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소상공인, 지역업자, 중소기업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공부하고 연구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기도 했다.

나인권 위원장은 "후보자가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기관장으로서의 사회성과 소용이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헌신하는 이사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청문회에서는 전북 신보 사옥 겸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따른 향후 계획, 100억원 특례보증 기업 책임소재 및 향후 대응 계획, 전북신보 손실액 급증 대책, 소기업 소상공인 고금리 대책, 리스크 관리 고도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완화 대책, 경영평가 결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요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에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도의회 의장 보고를 거쳐 오는 20일까지 전북 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김재훈기자



전북-베트남 상호관광 활성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외교사절단이 아베안 지역을 대상으로 전북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세일즈외교를 나선 가운데 14일 베트남 하오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전라북도 관광설명회에 김관영 도지사가 베트남 주요여행사와 상호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갖고 있다.

## "지방의원 일할 수 있는 구조·지원체계 조성"

윤정훈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서



윤정훈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무주,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회장)와 윤수봉 의원(완주, 수석대표), 김성수 의원(고창, 부대표)은 15, 16일 양일간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교류·협력 활성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지방정부의 권한에 비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지방의회는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등이 없어 지방의원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지

방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완주)은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도정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려면 지방의회 법 제정은 물론 의원별 정부보관관계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고창)은 "명실상부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개헌 추진,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원 상설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김재훈기자

## '전주 재개발사업지역 상가 쪼개기 더 이상 못한다'

### 이국 전주시의원 발의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전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주시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따른 재개발의 폐해를 막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물 소유자

는 자산평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 규모 이상일 때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음성적 지면 쪼개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전라중학교 일대에서는 재개발 구역 9개 지번의 상가를 313개로 나누는 등 불법 쪼개기로 인해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 희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이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지역이 정비되기 전 투자 수익을 보고 몰려든 투기세력 등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자율방범 필요 사항 규정

#### 김정수 도의원 발의 조례안

####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운영위원장 직선)이 도내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 지원을 규정할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39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에 따라 방법·범초소의 설치·시설개선 및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등 도내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상위법 제정과 발맞춰 업무 효율성을 위해 기존 자치행정국 소관인 자율 방범 활동 지원 업무를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내 안전과 질서 유지, 봉사 목적으로 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훈 기자

